

인지적 균형이론을 적용한 분단체제의 거시 메커니즘

1980~2000년의 남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정민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 서론

1) 연구배경

우리의 근현대사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여러 세계사적 사건들을 겪었다. 러시아(소련), 중국, 일본, 미국이 우리의 현대사에 영향을 준 열강들이었는데, 특히 미국은 6·25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논의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반미주의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 문제를 풀어내고자 한다. 통일에 대한 미래를 구상하려면 미국과의 우호 증진이 필요한데, 반미주

의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반미주의의 양상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 거시비교역사사회학적 방법론을 적용시킨 연구는 없었다.¹⁾ 특히, 본 연구는 국가 간 관계성을 분석의 횡축(橫軸)에 두고, 역사적 시간을 그 종축(縱軸)에 두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통일의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잘 조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민족의 자주성을 고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에 동북아 국가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반미주의(Anti-Americanism)’는 과연 무엇인가?

이 글에서 살펴보는 ‘반미주의’는 실체로서의 ‘반미’가 아닌 현상으로서의 ‘반미’이다. 즉, 80년대 이후부터,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슈화된 반미주의적 움직임과 그것의 집합적 여론형성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념적 입장들 가운데에서 반미주의의 당위성이나 그것의 실재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며, 논문의 가치중립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글에서 밝히려는 것은 최근의 반미주의 현상, 즉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이 이렇게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기원’과 그것의 메커니즘을 분단체제를 통해서 해명하려

1) 거시비교역사사회학은 Macro, Comparative, and Historical Sociology를 번역한 것으로 미국 역사사회학의 최근 연구경향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본 논문에 언급된 James Mahoney, Paul Pierson, Jack Goldstone과 더불어 Andrew Abbott, William Sewell Jr., Stanley Lieberman, Jeffrey Haydu, Margaret R. Somers 등이 참여하여 미시사건사부터 거시구조변동의 역사사회학적 설명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국내 북한학 연구에서의 적용은 구갑우,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참조.

는 작업이다.)²⁾ 즉, ‘반미주의’나 ‘반미주의자’가 아닌 ‘반미주의 현상’³⁾이라는 우리 시대의 사회문제를 통해서 분단체제의 변동을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해명해보려는 것이다.⁴⁾

이러한 물음, 즉 반미주의 현상의 이유(why)보다 형성과정(how)을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본 연구는 이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단 한국 현대사에서 반미주의가 거의 최초이면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났던 80년대의 반미주의를 분석의 준거(reference)로 삼았다.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반미주의 현상을 군사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영역으로 나누고 현재까지의 경향성을 검토했다.⁵⁾ 그 결과 반미주

2) 한국인의 대미인식 변화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유명익, 『한국인의 대미인식』(서울: 민음사, 1994)을 참조.

3) 이 글에서 논의되는 ‘반미주의’는 ‘반미주의 현상’에 다름 아니다. 즉, 반미주의자나 친미주의자와 같은 사회운동가를 초점에 두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방법론은 반미주의 현상의 통시적, 구조적 지속 안에서 분단체제의 인지적 변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어떠한 이념적 지지나 동조 없이 언론보도, 문헌, 그리고 서베이 자료를 통해서 ‘반미주의 현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다시 말해, 최근에 급격하게 번진 ‘반미주의 현상’과 그 기원을 분석하여 분단체제를 이끌었던 요인과 설명 틀을 검약적인 모델로 제시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반미주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성태, 『반미가 왜 문제인가?』(서울: 당대, 2003)를 참조.

4) 이 글은 구조주의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체제와 같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상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 지속적인 토대를 상정한다면 분단체제의 포괄적 구축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5) 대표적인 반미주의 사건은 1980년의 광주민주항쟁 이후 정치·군사 영역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 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문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 등으로 나타나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는 스포츠와 문화 영역에서 많이 촉발되었다. 특히 오노-김동성 사건을 비롯하여 월드컵 당시 오노 액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와 F-15 강매문제, 아프간 파병 문제 등 군사적 영역의 사건도 여전했으며, 효순이·미선이 사건에서는 촛불시위를 통한 새로운 시위 형태도 등장했다.

의가 재생산되는 역사적 양태를 끌어낼 수 있었다. 사건은 역사적 우연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재현될 때는 구조화되면서 체계적 반복을 낳는다. 반미주의 현상은 이러한 구조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가? 동북아의 헤게모니는 변화된 양상을 보이지만 이러한 경향성(tendency)은 이념적 갈등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닐까?⁶⁾ 본 연구는 계속되는 반미주의 ‘현상’에는 분단체제라는 ‘구조’가 바탕에 있다고 가정한다.

2) 반미주의 현상과 분단체제: 역사적 측면에서

반미주의 현상은 대략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째 단계는 식민지 해방 전후부터 80년대 전까지의 시기이다. 이때는 몇몇 사건에서 반미주의의 조짐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반미운동으로까지 확산되지는 못했다. 둘째 단계는 80~90년대 사이의 반미주의이다. 이 당시에는 반미주의가 촉발적 사건에 더하여 외재적 요인과 결합되어 표출되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집합적인 기억으로⁷⁾ 존속했다. 이들은 반미주의의 ‘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y)’⁸⁾을 보여줌으로써 반미현상의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이 되었다. 셋째 단계는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반미주의이다. 이 시기는 80~90년대의 반미주의가

6)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서울: 나남출판, 2004) 참조.

7) 80년대 이후의 반미주의를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코호트(cohort)를 당시의 문헌이나 서베이 자료에서 찾아내어 그들의 체험을 재구성하고 현재와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8) 발현적 속성이란 개인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 집단 수준의 특이성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과학적 미시-거시 통합모델의 핵심 개념으로 이용된다.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서울: 사회비평사, 1996).

쇠퇴하거나 일부 해소되는 정세와 맞물려 새로운 판도를 형성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과거의 반미주의 현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80~90년대의 반미주의는 그 발현적 성격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타의 현안들과 밀접하게 맞물려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런 현안들은 역사적, 구조적으로 우리의 현대사가 형성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반미주의 현상의 반복적인 재현(repetitive representation)⁹⁾이 구조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주었다. 80~90년대 민중의 논제는 주로 정치적 민주화였는데, 당시 정부는 미국의 협조 속에서 반공 이념을 대중적인 동의의 기제(assenting mechanism)로 사용했다. 그래서 80~90년대의 반미주의는 구심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 또한 분명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부터는 군부정권은 사라졌고 우리의 정치경제적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으며 동북아의 외교적 관계도 다각화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미국의 외교적 전략도

9) 재현(再現)은 실재(實在) 속성으로서 양태(樣態)가 부재하다가 다시 지각되거나, 혹은 A라는 모습에서 A'라는 모습으로 재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념철학적 의미에서 재현은 실재의 다양한 변용(變容) 속에서 포착되는 것으로, 실재에 부속되는 속성인 것이다. 마치 피부 두드러기는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에 '존재(存在)'한다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오직 그 원인, 예를 들어 '진드기 알러지에 의한 만성 담마진(병명)'과 같이 존속하는 실재만 '있다'고 해야 하는 것과 같다. 현대철학은 시뮬라크라(simulacra)와 같은 부속적 현상을 그 자체의 실재로 보기도 하지만,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어디까지나 현상/실재(결과/원인)의 전통철학적 실재론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 글 역시 반미주의 자체를 본질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상으로 나타난 반미주의는 동조(compliance)를 통해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중적 동의를 구했는데, 이런 '집단적 인지(gathered cognition)'는 '발현적'이지만, 그 발현성이 다시 대중의 인지를 구속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현된 '사회적 사실'은 '제도'나 '의례'와 같은 기제를 통해서 정형화되지 않는 한 사회구성원을 재구속하는 강제성을 갖진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반미주의'를 '반미주의 현상'으로 규정한다.

이념보다는 실리추구적으로 바뀌었다. 반미주의 현상도 그 운동을 이 끌었던 논제가 사라지면서 수위가 약해졌다. 반미주의는 이제 80년대 운동권의 후일담(reminiscences)으로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2000년 이후의 몇몇 사건들이 이 문제를 촉발시켰다.¹⁰⁾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인터넷의 확산이나 월드컵의 집합적인 기억, 혹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이런 현상을 재현시키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있는 것일까? 결국 분단체제의 구조적 지속이 야기한 하나의 효과로 반미주의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3) 반미주의와 분단체제: 구조적 지속의 측면에서¹¹⁾

반미주의가 구조적으로 지속하는 양상은 80년대의 반미주의와 오늘날의 반미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성격을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반미현상을 반미감정, 반미운동, 반미주의로 세분화

10) 주요 사건들은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언론에서 이것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법이었다. 『중앙일보』, “知美 用美 전략을”, 2000년 4월 13일; 『동아일보』, “감상적 반미주의”, 2002년 3월 26일; 『동아일보』, “위험한 반미”, 2002년 3월 9일; 『한국일보』, “주목되는 반미감정의 줄기와 잎”, 2002년 2월 7일; 『문화일보』, “한국 반미주의의 교훈”, 2002년 1월 21일; 『중앙일보』, “반미주의 왜 문제인가”, 2002년 1월 21일; 『경향신문』, “극단적 반미주의를 경계한다”, 2002년 2월 20일 참조.

11) 반미주의 현상과 관련된 수준을 감정, 운동, 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이 글에서 살펴보려는 ‘소재’인 반미주의가 어떻게 사회심리학에서의 하이더(F. Heider) 이론과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글에서 밝혀내려는 것은 분단체제의 변동 메커니즘이지, 반미주의의 실제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 어떻게 대중에게 ‘확산’되는지, 그리고 그런 확산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통해 분단의 문제를 짚어보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군중효과는 감정 → 운동 → 주의(-ism)로 발전·확대되는데, 집합적 현상으로서 반미주의가 대중에게 촉발되고(triggered) 발전되는 과정에서 80년대의 반미주의는 주의적 성격에 가깝고, 오늘날은 감정이나 운동에 머무른다고 할 수 있다.¹²⁾ 우선 개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반미감정이다. 이것은 직·간접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촉발되는 반미태도인데, 직접적 요인은 대체로 승패욕을 자극하는 운동경기에서의 불공정함, 미군 문제와 같은 종류의 사건이고, 간접적인 요인은 경제적 조치, 정치적 예측 등이 있다.¹³⁾ 둘째는 반미운동으로 반미감정이 사회전반의 동의를 얻어 확대된 상태이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매개 요소가 있다. 시민단체나 운동권 조직의 움직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반미주의인데, 반미라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취하는 사조나 이념을 말한다. 이것은 반미주의를 야기하는 요인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에게 반미주의를 내면화시키게 만드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한다.

12) 지면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하지 못했으나 이러한 결론은 80년대와 최근 서베이 자료의 비교에 근거하고 있다. 80년대 자료는 김진웅, 『한국인의 반미감정』(서울: 일조각, 1992)의 부록에 첨부된 것을 기준으로 문화방송의 “한국, 한국인 광복 45주년 국민의식 조사”, 1990년 8월 10일; 『조선일보』, 1985년 3월 15일, 1990년 9월 17일 관련기사 통계자료; 『동아일보』, 1987년 4월 1일 관련기사 통계자료; 『중앙일보』, 1988년 6월 6일, 1989년 9월 22일 관련기사 통계자료를 참조했으며, 2000년 이후 자료는 시사저널이 주관해 미디어리서치에서 2002년 2월 23일 수행한 “대미감정 여론조사”(표본: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을 통해 수집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 조사방법: 전화 여론조사로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 ±3.1% 포인트)를 참조했다.

13) 반미감정의 확산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김진웅, “반미주의의 성격과 기원,” 한국미국사학회 편, 『미국사 연구』, 제2권(1994), 199~228쪽;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77~80쪽 참조.

결국, 반미감정-반미운동-반미주의는 하나의 궤를 이루면서 상호 촉발하는 폐쇄적 메커니즘이 된다. 즉, 하나의 사건이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을 매개로 반미운동이 확산된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초기 세력만의 일시적인 운동이 아닌 반미주의라는 상대적으로 길고 더 큰 공감대를 가지며 또한 더 안정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논제로 부상한다. 이런 단계에서의 반미주의는 뚜렷한 주도세력, 지향점,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고유한 방법을 가지기 때문에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화는 반미주의를 야기하는 감정적인 사건 없이도 재생산된다. 오히려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 더 쉽게 촉발되면서, 반미운동과 반미주의로 확산되는 시간을 줄이고 더 큰 사회적 반향으로 성장한다. 즉, 반미주의 현상이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미주의의 관계 쌍은 반미주의의 바깥에 있지만 반미주의와 쉽게 결합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반공 이데올로기, 통일 이념, 제국주의론, 민족주의, 자주-자결권 등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 상황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과잉 결합되는 국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는 5·16 이후 민주화 운동과 결합된 반미주의 현상이다. 그러나 2000년대의 양상은 이런 외재적 요인의 다수가 사라지거나 변형됨으로써 반미주의의 강도나 성격이 분단체제의 구조적 효과에 부수하는 정의적(emotive) 성격으로 바뀌었다. 반미주의와 같은 현상이 분단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조적 요소라면 분단체제의 역사적 변동을 국가 간 인지관계의 변화로 모델링하는 것이 북한연구에 새로운 의미를 주지 않을까? 이것은 거시-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예측하는 모델을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는 인지적 균형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이론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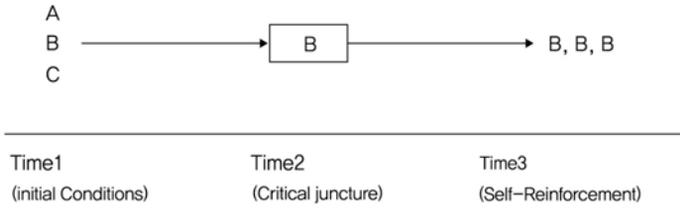
분단체제를 역사사회학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은 마호니(J. Mahoney), 골드스톤(J. Goldstone), 피어슨(P. Pierson) 등 거시비교역사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핵심개념이다.¹⁴⁾ 이것은 “우연적 사건이 결정론적 속성을 가진 제도적 경향이나 사건의 연쇄로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고정시키는 것”¹⁵⁾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효과를 통해서 자기-강화(self-reinforcing)한다. 하부구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구축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분단체제는 경로의존적이다.

<그림 1>에 따르면, ‘시기 1’에서는 다양한 국면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론은 어느 것이 채택될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한다. ‘시기 2’에서 B가 다른 선택지에 경쟁하여 최초로 채택되었지만 이것은 우연한 사건일 뿐이다. 그러나 ‘시기 3’이 되면 B는 초기의 이점을 이용하여 그것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게 된다. 즉, 한번 고정된 제도적 패턴은 ‘결속(lock-in)’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거시역사사회학의 변수도 이런 결합(conjuncture)의 지속에 의해 일정한 경향성을 가진다. 즉, 이

14) Mahoney, James,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Social Theory*, vol. 29, no. 1(2000), pp. 1~2; Goldstone, Jack A., “Initial Conditions, General Laws, Path Dependence, and Explanations in Historic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4, no. 4(1998), pp. 2~5; Pierson, Paul,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2000), p. 3.

15) Mahoney, James,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p. 1.

<그림 1> 경로의존 모델



글에서 사회심리학의 인지적 균형 이론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법론적으로 교환가능한 이유는 시간성이 고려되지 않는 균형 이론에 불균형과 균형의 결과(sequence)를 부여했고, 더불어 경로의존 개념을 도입하여 거시적 상황에서의 변수의 ‘선택’과 ‘지속’이라는 특성을 응용했기 때문이다.¹⁶⁾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s)’과 ‘일반법칙(general law)’은 경로의존성의 성격을 규정한다. 골드스톤이 쿤주의자들(kuhnist)을 인용하면서 지적하고 있듯이¹⁷⁾ 역사사회학에서 일반법칙은 사실 방법론적 개념이라 할 수 없다. ‘소수의 사례(small N)’를 가지고 귀납이나 연역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사회학의 방법론은 합리적 선택이론(RCT)이나 밀(J. S. Mill)의 차이법과 일치법으로 후퇴하고

16) 마호니(Mahoney,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p. 22)를 참조하면, 그의 시퀀스와 국면에 대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만을 제시하여 정작 사건들 간의 인과성(causality)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에 의한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하이더의 균형이론이 가지는 공리(axiom)는 이런 난점이 극복될 수 있는 단초를 보여준다. 즉, 역사사회학적 설명 틀이 초기 조건, 합리적 선택,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구성되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의 한 방법이 검약적 예측모델의 제시이다.

17) Goldstone, Jack. A., “Initial Conditions, General Laws, Path Dependence, and Explanations in Historical Sociology,” pp. 2~5.

만다. 그러나 RCT 이론은 합리적 행위자만을 보기 때문에 역사사회학적 특징인 거시적 국면을 설명할 수 없고, 차이법과 일치법은 스카치폴(T. Skocpol) 이후에 발전될 수 없었다. 버러웨이(M. Burawoy)에서 나타나듯이,¹⁸⁾ 그 방법론의 정교화만으로는 사건들 사이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합리적 설명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이법과 일치법은 새로운 사례에 의해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 분단체제가 1945~60년의 초기조건을 중심으로 경로의존성을 가진다는 주장은 이런 이유에서 특별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지적 균형이론이라는 일반법칙을 도입한다. 즉, 80년대 이전의 친미적 경향을 초기 조건으로 잡고, 미국과의 관계 변동이 분단체제의 국면 변화와 조응하는 현상을 검토했다. 경로의존 과정에서 스스로 국면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하려는 시도가 항상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응용은 일반법칙으로 변동의 요인까지 설명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2) 연구가설

반미와 친미의 이념적 대립이 분단체제의 구조적 효과라는 전제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가설을 상정한다. 첫째 남북미의 국가 간 인지관계의 변동은 분단체제의 숨은 요인이다. 둘째 인지적 균형모델을 이용한 남북미의 국가 간 관계 모델링은 분단체제의 역사적 변동과 조응한다. 첫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하이더(F. Heider)의 균형이론의 단면모델을 정립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립된 모

18) Burawoy, Michael, "Two Methods in search of science: Skocpol and Trotsky," *Theory and Society*, vol. 18(1989), pp. 5~12.

델을 바탕으로 역사사회학적인 이론 틀을 적용하여 둘째 가설을 검증했다.

한미관계가 반미와 친미의 여론으로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호와 적대라는 집합적인 인지가 분단체제로 고착되어 있는 관계를 끌어낸다는 점은 중요하다. 초기 반미주의부터 나타났던 ‘반미주의 = 민주화운동 = 자주권 형성 = 반제국주의’라는 등식은 미국과 북한을 항상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한국의 이중적 어려움을 드러냈다. 즉, 북한의 존재는 작게는 우리의 이념 간, 세대간 분열 상황에 나타나며, 크게는 현대사의 체험 과정에서 축적된 분단의 문제로 자리했다.¹⁹⁾ 그러므로 한미관계에는 남한과 미국이 각기 북한에 대해 가지는 관계의 성격이 매개되어 나타나며, 이러한 삼자관계는 결국 분단체제의 토대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하이더의 모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삼자관계에서 균형점을 회복하려는 속성이 일반법칙이라는 점을 명제화했다. 그래서 분단체제의 불안정 국면이 안정 국면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반미주의는 그 층위에 따라 반미감정, 반미운동, 반미주의의 차원으로 나뉜다. 반미감정이 일시적이고 정의적인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반미운동은 이것이 실천과 행위자, 그리고 가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반미주의는 반미운동이 집합적이고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상당한 동조를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세 층위는 상승적이며, 반미주의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과정에서는 다른 반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반미감정으로 촉발되는 되먹임 구조(feedback loop)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반미주의는 정치, 경제, 군사,

19) 최완규 편,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정성기, 『탈분단의 정치경제학과 사회구성』(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참조.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개별적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 구조적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틀에 의해서 사건을 분류하고 대중적 의식을 알아본 결과 80~90년대 반미주의와 오늘날의 반미주의는 상이하다. 전자가 구조적, 발현적, 변혁적인 성격을 가지는 반미주의라면, 후자는 인식적, 정의적인 차원의 반미감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미주의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 기초하면 반미주의를 매개로 하는 국가 간 관계의 안정/갈등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동이 80~90년대에는 ‘군부정권-민주세력-미국정부’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며, 90년대 이후에는 ‘한국-북한-미국’²⁰⁾의 관계에서 생겨난다고 상정한다. 그리고 이런 역동성을 하이더의 균형이론을 통해서 검증했다. 대중의 인지적 태도가 일정한 거시적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분단체제의 통시적 연구에서 이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²¹⁾

3)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지적 균형이론이 분단체제를 역사사회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적합한 일반법칙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두 가지 가설을 상정했는데, 하나는 하이더 모델의 정립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의 동학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대중의 집합적 인지를 균형모델로 재구성하기 위해 서베이 자료를 이용했다. 연구자료는 2000년 이후 남북미의 인지관계를 조사한 것 중에서 대표성이 담보된 ‘한국인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2003

20) 미국과 북한에 대한 남한 국민의 인지적 태도를 의미한다.

21) 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화에 관한 통시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희연,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서울: 함께읽는책, 2003) 참조

년 1월 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관, 한국리서치 실사)를 활용했다. 표본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이며,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3.0\%$ 포인트였다. 이 서베이 자료를 통해서 반미주의 현상을 계량화했고, 북한에 대한 인지태도와의 관계를 하이더 모델로 정립했다. 그리고 세대간 효과를 정교화하여 개인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 집합적 인지의 차원을 도출했다.²²⁾ 다음으로 하이더의 단면모델을 통시적 차원에서 분단체제의 역사사회학적 변동과정으로 모델링했다.²³⁾ 반미주의의 국면이 진행된 성격과 마찬가지로, 분단체제와 균형이론이 각 연대별로 조용하는 과정을 재구성하는 방법은 구성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거시적 서사(narrative)를 취했다. 해당 시기를 보편적으로 기술하는 집합적 인지 형태는 우호(+)와 적대(-)의 이항정보로만 요약되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향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

3. 분석결과

1) 계량적 접근

(1) 인지적 균형이론의 공시적 검토

북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독립변수로 두고, 이들 독

-
- 22) 이 과정에서 생태학적 오류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 23) 연대별로 서베이 자료가 있다면 각각의 인지적 균형모델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80년대에는 그런 조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역사사회학적인 이론 틀을 통해 오늘날의 하이더 모델이 각 연대별로 나타난 형태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반미주의의 경향이 연대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링에 대한 내적 타당도의 문제는 없었다.

<표 1> 북한과 미국에 대한 우호도의 회귀분석 계수 테이블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t	Sig.
		B	Std. Error	Coefficients		
3	(Constant)	3.860	.089	Beta	43.185	.000
	문항 4 [†]	-.222	.027	-.250	-8.104	.000
	문항 5 [‡]	-.115	.028	-.128	-4.152	.000
	문항 1 [§]	-9.243E-02	.025	-.106	-3.636	.000

[†] 문항 4.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의 안보에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 문항 5.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보다 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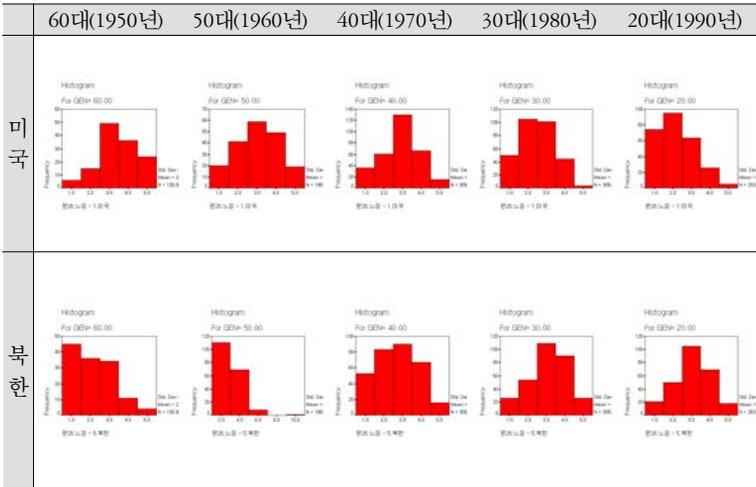
[§] 문항 1.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대북지원은 계속해야 한다.”

립변수가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호감도보다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경우 응답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았다. SPSS(ver.12.0)를 이용하여 위계적(stepwise)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1, 4, 5 문항을 포함한 모델이 도출되었다. 계수표는 <표 1>과 같다. 유의성의 p-value는 0.001 미만으로 유의했으며, $R=0.385$, $R^2=0.148$, adjusted $R^2=0.146$ 이었다. 잔차의 히스토그램, 정규확률도, 잔차도 모두 회귀분석 가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회귀계수는 모두 음수값을 나타내 연구가설을 지지했다. 즉, 북한과 미국이 한국과 인지불균형에 있었다.

$$\text{미국 호감도} = 3.860 - 0.222(\text{문항 4}) - 0.115(\text{문항 5}) - 0.09243(\text{문항 1})$$

<표 2>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우호에서 적대로, 그리고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적대에서 우호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로써 한국에서의 북한과 미국의 인지적 위치가 시간의

<표 2> 세대와 연대로 정교화한 미국과 북한의 우호도 변화



* 히스토그램의 X축은 각각 ‘좌측 →우측’이면 ‘반감 →호감’을 의미하며, Y축은 각 빈도를 나타냄.

흐름에 따라 변해왔고, 또한 그 구체적인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시적 분석에서의 중화된 호감도는 역사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가설에 대해서 연령의 증가로 인한 보수화가 혼란 요인(confounding factor)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수적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연령으로 회귀분석했다. 만약 보수성을 측정하는 척도와 세대와의 관계가 위 가설을 기각할 정도로 높지 않다면, 연령에 따른 보수화라는 가설을 기각하고 세대가 역사를 대변한다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보수성 측정에 사용된 문항은 <표 3>과 같은데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²⁴⁾ ① 원칙에 대한 신뢰: 문항

24) 각 속성에 대해 반대경향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를 표시했다.

<표 3> 보수성 측정에 사용된 문항

1. 많은 경우 원칙대로 하다가는 손해를 본다 ()
2. 개인 사정이 있어도 직장 회식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3.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면 상하 구별이 분명해야 한다 ()
4.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한국사회에서 상류층이 될 수 있다 ()
5. 우리 사회에서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
6.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집안배경이 필수적이다 ()
7. 한국은 1등에 대한 보상이 너무 큰 사회이다 ()
8. 사회가 잘되려면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
9. 경제발전을 위해 재벌은 필요하다 ()
10. 한국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
11. 떠날 수만 있다면 이민을 가고 싶다 ()
12.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은 자신보다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
13. 지도자를 뽑을 때 능력보다 호감이나 이미지가 중요하다 ()
14. 다른 사람의 비리를 알아도 내게 손해가 없다면 모르는 체한다 ()
15. 나의 권리라도 공익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
16. 연장자의 경험과 지혜를 중시해야 한다 ()
17. 보상이 없더라도 성실하고 근면해야 한다 ()
18. 우리의 전통적 격식과 의례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

1, 5, 6, 10, 14, ② 상하관계 강조: 문항 2, 3, 8(-), 16, 18, ③ 계층이동 불가능성: 문항 4(-), 7, 17(-), ④ 지도자에 대한 신뢰: 문항 12, 13, ⑤ 제도예의 순종: 문항 9, 15, ⑥ 사회에 대한 신뢰: 문항 11(-).

위의 문항을 독립변수로 두고 연령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했고, 18개 문항 중 11개 문항을 포함시키고 7개 문항을 제외시켰다(표 4). 포함된 문항은 순서대로, 18, 17, 5, 3, 11, 9, 8, 15, 4, 1, 12 순이었다. 위의 내용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귀분석에 포함된 문항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칙에 대한 신뢰: 문항 1, 5, ② 상하관계 강조: 문항 3, 8(-), 18, ③ 계층이동 불가능성: 문항 4(-), 17(-), ④ 지도자에 대한 신뢰: 문항 12, ⑤ 제도예의 순종: 문항 9, 15, ⑥ 사회에 대한 신뢰: 문항 11(-).

<표 4> 보수성 측정 문항을 응답 연령으로 정교화한 회귀모델 계수 테이블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1	(Constant)	25.057	3.082		8.131	.000
	문항 18	2.276	.350	.177	6.504	.000
	문항 17	2.070	.409	.138	5.067	.000
	문항 5	-1.539	.285	-.145	-5.407	.000
	문항 3	1.780	.338	.142	5.265	.000
	문항 11	-1.004	.249	-.107	-4.038	.000
	문항 9	1.351	.317	.111	4.259	.000
	문항 8	-1.105	.338	-.083	-3.269	.001
	문항 15	1.037	.337	.079	3.077	.002
	문항 4	.675	.287	.064	2.351	.019
	문항 1	-.780	.363	-.056	-2.149	.032
	문항 12	-.696	.349	-.052	-1.997	.046

최종적으로 얻어진 회귀모델은 다음과 같으며, 계수 테이블은 <표 4>와 같다. 11개 문항이 모두 포함된 모델의 경우, 모델의 유의성에 있어 p-value<0.001으로 나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에 있어서 R=0.500, R²=0.250, adjusted R²=0.243을 나타냈다.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과 보수성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설명력은 30% 미만이었고, 표준화 계수의 경우 절반가량이 0.05를 전후한 값이었다. 따라서 연령은 보수성과 연관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약했다.

$$\text{세대} = 25.057 + 2.070(\text{문항 17}) + 2.276(\text{문항 18}) - 1.539(\text{문항 5}) + 1.351(\text{문항 9}) + 1.780(\text{문항 3}) - 1.105(\text{문항 8}) - 1.004(\text{문항 11}) + 1.037(\text{문항 15}) - 0.780(\text{문항 1}) + 0.675(\text{문항 4}) - 0.696(\text{문항 12})$$

<표 5> 북한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에서 연령에 대한 회귀모델의 계수 테이블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4	(Constant)	50.226	1.146		43.837	.000
	문항 4	-1.801	.327	-.176	-5.510	.000
	문항 1	-1.316	.306	-.130	-4.308	.000
	문항 5	-1.343	.333	-.129	-4.030	.000
	문항 2	.879	.269	.095	3.264	.001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과 연령 간의 회귀분석을 했다. 위에서 북한과 미국이 인지적으로 부(-)적 관계임을 확인했으므로, 연령과 북한에 대한 문항과 회귀분석만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설확인이 가능하다. 회귀분석의 결과, 3번 문항을 제외한 4개 문항과의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회귀계수는 2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모델 유의성은 p-value < 0.001 이고 R=0.318, R²=0.102, adjusted R²=0.099였다.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의 가정들을 만족하고 있었다.

$$\text{세대} = 50.226 - 1.801(\text{문항 4}) - 1.316(\text{문항 1}) - 1.343(\text{문항 5}) + 0.879(\text{문항 2})$$

북한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의 설명력은 보수성 측정 문항의 설명력보다 낮았다. 그렇지만 보수성 측정 문항 역시 R²가 0.250 정도였으며, 설명변수 중 절반가량은 표준화상관계수가 0.05 정도에 머물렀다. 보수성 측정 문항이 18개 문항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의 R²=0.102는 보수성 측정 문항의 그것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라 북한과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다르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있다. 결국 세대구성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미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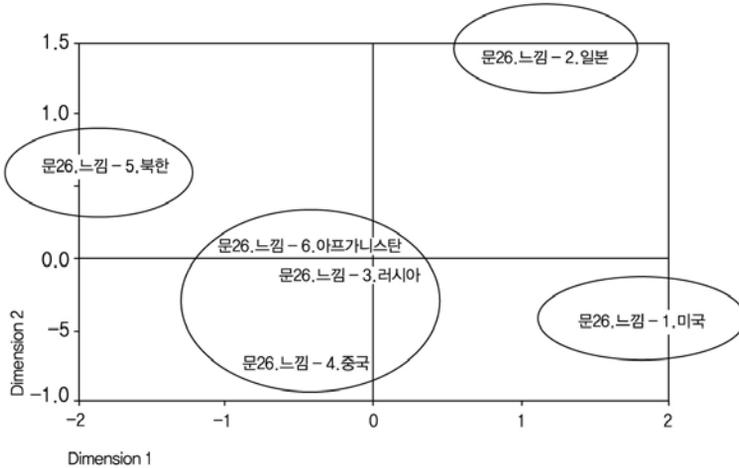
(2) 다차원척도 분석

위에서 공시적인 접근과 통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지적 불균형을 확인했다. 이제 삼자관계를 단일 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를 적용한다. MDS는 변수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를 공간모델로 시각화시켜 주는 것이 장점인데, 그 방식은 상대적 거리로 개념화될 수 있는 자료를 근접성 행렬(Proximity Matrix)로 만들어 좌표평면에 도해하는 것이다. 단, 이것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관찰된 거리와 지도로 표현된 거리의 불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스트레스 값과 대상들 간에 측정된 거리가 지도상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RSQ(결정계수: R Square) 값을 고려해야 한다. 스트레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RSQ 값은 1에 가까울수록 MDS 지도는 실제 자료상의 거리를 더 반영한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D_{jk} = \left(\sum_{i=1}^p |x_{ij} - x_{ik}|^2 \right)^{1/2}$$

다음으로 동원된 차원의 수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은 유클리드 거리 모형에 의해 그려진 선형 적합의 산점도(Scatter Plots of Linear Fit)가 직선에 가까울수록 만족할 만하다고 본다. 산점도의 Y축은 실제 자료상의 거리를, X축은 지도상에 표현된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 2> MDS 분석결과



지도상의 거리가 관찰된 거리를 완벽하게 반영할 경우 산점도상에서 모든 점들은 직선상 위에 배열된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직선 주위에 흩어진 모양을 보일 것이다. 탐색적 분석 결과 산점도는 이상적 상태로 나타났다.

MDS 분석결과, $Stress=0.09929$, $RSQ=0.93908$ 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2>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이 중심에 위치해 있고 중국과 일본이 상하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으며, 미국과 북한 역시 좌우로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이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에서 수행한 공시적·동시적인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하이더의 이론에 대한 정태적인 측면의 가설, 즉 반미주의 연구에서 북한이라는 숨은 요인으로 분단체제가 고려돼야 한다는 첫 번째 가설의 근거를 제공한다. 좌표평면에는 두 개의 요인에 의해 구성된 2차원 공간에

6개의 변수들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치가 중간점에 있지만, 크게 보아 미국과 일본을 한 단위로, 중국, 러시아, 북한, 아프간을 다른 한 단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요인에 의해 분리된 위와 같은 집락은 다시 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아프가니스탄으로 나뉘지는데 1차적 구분선이 위의 MDS 분석처럼 나타난다면 사후적으로 나타한 두 번째 구분선은 미국이 ‘악의 축’ 발언을 한 후에 북한, 아프가니스탄과 더 먼 인지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MDS 그래프와 종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분단체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 간 인지이론이 도출된다.

2) 역사사회학적 검토

(1) 인지적 균형 이론의 통시적 적용

지금까지 반미주의의 구조적 도식이 분단체제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살펴보았고 국가관계의 집합적 인지가 이러한 상황의 한 측면일 수 있음을 검토했다. 이제 분단체제의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한미관계 속에 북한을 어떻게 정위(定位)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한다. 즉, 반미주의가 한국의 내면에 남아 있는 이상적인 정체와 과거의 앙금을 청산하는 문제 가운데에서 길항(拮抗)하고 있다면, 그 해결에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의한 분단체제의 극복이 전제되는 것이다.²⁵⁾

본 연구는 위 문제를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하이더의 균형이론을

25) 통일과 분단체제의 극복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봉화, 『대결에서 공존으로』(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이영선 편, 『통일준비』(서울: 오름, 1997); 홍순호 외, 『북한인식과 한반도』(서울: 살림, 1999) 참조.

통해서 재구성한다. 균형이론은 여러 인지요소들이 스트레스 없이 존재할 수 없을 때 긴장이 생기고, 결국 인지구조를 바꿔 균형상태에 이르러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하나의 상황을 지각하는 P, P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어떤 사람 O, 그리고 P와 O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제3의 대상(또는 사람) X의 삼자로 구성된 관계구조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 구조를 각각 한국(p), 북한(o), 미국(x)으로 적용시켰다. 관계는 선호(+)와 적대(-)의 형태로 성립하는데,²⁶⁾ 이들은 언제나 균형된 상태로 움직인다. 그래서 80년대 이전의 반미주의는 $p \rightarrow x$ 의 관계가 +였고, $p \rightarrow o$ 의 관계는 -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지적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80년대로 진입하면서 일련의 반미운동은 $p \rightarrow x$ 의 관계를 -로 만들었고, 이에 따라 인지적 불균형이 생겼다. 그래서 인지적 균형에 이르기 위해 $p \rightarrow x$ 의 관계가 +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p \rightarrow o$ 의 관계가 +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그 당시 반미주의는 독재타도에 대한 대중의 동의가 마련되면서 환원될 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그들이 주장했던 구호 가운데에는 자주권의 고양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통일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따라서 $p \rightarrow o$ 의 관계가 +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26) p-o-x의 관계에서 p-o와 p-x의 관계는 p의 자아관여를 바탕으로 성립하지만, o-x는 o의 신념에 의하기 때문에 세 축은 대칭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적용하는 모델에서는 o-x가 북한과 미국의 관계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언제나 반미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의한 지적은 논외로 할 수 있다. 정지원·차재호, “연계수정으로 본 Heider 삼원구조 내의 태도 연계와 신념연계의 질적 차이,”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연차학술발표대회(1998); 그리고 차재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한국심리학회 학술심포지엄, 통일과 심리적 화합(1993)을 참고하면, 반미감정이 우리가 위에서 제시한 하이드의 이론에 따라 궁극적인 남북한의 결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반명제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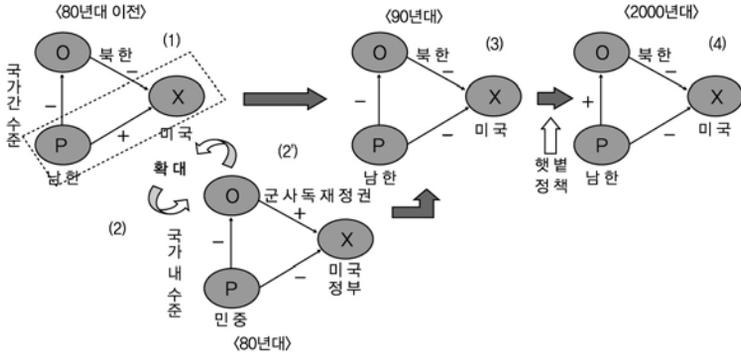
태도는 김대중 정권 이후 햇볕정책에 의해 공고화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반미감정은 지속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구조적 효과를 낼지는 정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적어도 반미감정이 북한과의 인지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변동의 기제는 미국-한국-북한의 인지적 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틀이 한미관계에서 나타난 갈등의 한 단면으로서 반미감정을 포착한다면 이것을 극복하고 지양하는 방법은 우리가 북한과 어떤 공조를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반미감정이 80년대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 분명한 이상, 북한과 남한의 지속적인 통일에 대한 노력은 반미주의의 극복을 위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통일을 염원한다면 그들의 자주성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임을 보여준다.²⁷⁾

<그림 3>을 참조하면, 80년대 이전에는 P[남한], O[북한], X[미국]의 관계가 각각 $p \rightarrow o$ 는 -, $o \rightarrow x$ 도 -, $p \rightarrow x$ 는 +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즉, 친미주의 모델이다. 그러나 80년대로 진입하면서 $p \rightarrow o$ 는 -, $o \rightarrow x$ 도 -, $p \rightarrow x$ 도 -의 상태가 되었다. 바로 $p \rightarrow x$ 의 차원에서 광주 민중항쟁으로 인해 불균형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런 구조적 불안정은 해소되었다. 특히, $p \rightarrow o$ 는 +, $o \rightarrow x$ 는 -, $p \rightarrow x$ 는 -가 되면서 새로운 안정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북한을 새로운 동반자로 인식한 햇볕정책의 결과였다.²⁸⁾

27) 『문화일보』, 2000년 12월 21일 1면 기사에 따르면, “통일문제 국민의식 조사”에서 국민들은 남과 북은 하나 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80.0%가 답변했으나, 경제사정이 나빠지더라도 통일이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은 40.1%에 불과했다.

28) 아태평화재단 편,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서울: 한울, 2000);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서울: 필맥, 2003);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

<그림 3> 하이더의 인지적 균형이론을 적용한 분단체제의 변동구조



* 참조: + 우호적 관계, - 적대적 관계(pox 관계에서 -가 짝수이면 균형상태임). 특히, 균형이론은 pox 관계가 불균형적일 경우 필연적으로 균형관계로 보정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임.

변동과정에서 (1)-(2)-(2')의 시퀀스는 다음을 의미한다. 80년대 이전에는 미국의 경제원조와 반공이데올로기, 반공정책에 의해 북한은 주적이자 남한의 완전한 타자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와서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역사적 촉매로 내적 불균형 상태가 도래했다. 즉, (2)에서와 같이 군사정권과 미국의 연계가 대중적 갈등을 만들게 된다. 그 결과 민주화투쟁과 반미시위가 함께 일어났다. 민주화 이후 국내적 상황은 통합되고 분단체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이동하는데, 특히 (2')의 상황은 (1)과 (2)를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물질적 조건으로서 '분단체제'를 (3)의 수준으로 발현시켰다. 여기서 핵심은 (1)의 균형상태가 (4)의 균형상태로 나가는 과정이 (2)의 국가 내 수준에 의한 '자 기준거(self-reference)'적인 과정이 개입되어 제2의 균형을 낳게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나타난 pox 관계의 성숙 국면으로

택』, 279~324쪽.

해석된다.

결국 전체적인 분단구조의 동학은 (1)에서 (4)의 순서로 변했다. 80년대 이전은 남한-미국의 혈맹관계에 의해 북한과 대립하는 균형상태였다(1). 그런데 80년대로 진입하면서 남한 내부는 군사정권과 민중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민주화 투쟁이 일어난다(2). 그 후 군부가 퇴진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p와 o의 구조적 대립은 해소된다. 그에 따라 반미주의도 국내적 수준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이동한다(2'). 90년대에는 반미주의의 경향성으로 px의 관계가 -가 되는데 이것은 불안정한 관계이므로 어떤 균형의 계기를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햇볕정책과 남북 간 화해무드는 po관계를 +로 만들면서 분단체제는 중장기적인 안정구조로 이행시킨다(4). 이후의 분단구조는 통일의 요건(남북공동선언 실천, 군축, 민간교류, 경제협력, 민족통일성회복 등)과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개방되어 있다.

반미주의는 단순한 한미관계가 아니며 그 속에는 북한이라는 숨은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또한 반미주의와 남북한의 공조가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반미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는 과정과 동시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곧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지향점은 통일과 무관하지 않으며, 통일은 또한 반미주의 현상의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을 청산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80년대의 반미주의에 대한 균형모델의 적용에서는 P[민중], O[군부],²⁹⁾ X[미국]라는 국내적 차원이 중첩되어 있음

29) po의 P로의 통합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p와 o의 수준은 실제로는 여러 층위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상대적 개념으로만 나타냈다는 점을 밝혀둔다. 사회운동 조직의 형성과 구성원들에 대한 정교화와 국가 유형 수준과 체제(regime), 그리고 정권과 정책의 수준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구성체를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조희연 편, 『국가폭력,

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결국 P와 O의 구조적 갈등이 문민정부가 들어 서면서 사라졌던 사례를 볼 때, P[남한], O[북한]의 분단구조가 결국 통일에 이르러 새로운 국제정세를 만들어낼 것임을 보여준다. 즉, 통일의 당위성이 반미주의의 지양과 함께 당위적으로 요청되는 근거가 드러난다.³⁰⁾

(2) 모델의 확장 및 응용

지금까지의 균형이론을 통해서 서론에서 논의한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구조는 90년대 이전까지의 반미주의가 미국 정부-한국 정부-한국 국민의 사이에서 나타났던 갈등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미 간의 역사적 구도에 결정적 숨은 변인으로 북한의 위치가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이론은 이제 좁은 관계가 아니라, 미국-한국-북한이라는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갈등과 협력 게임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방안은 무엇인가? 바로 80년대의 상황에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서울: 함께읽는책, 2002) 참조. 그들 각각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Poulanzas, Nicho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London: Verso, 1978) 참조.

30) 특히 위의 도식에서 햇볕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글에서 하이드러의 이론이 하나의 사회과학적 메커니즘으로서 자기완결성을 가지게 하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즉, A 균형상태에서 B 균형상태로의 이행과정이 민주화를 위한 민중운동에 의해서였다면, 새로운 균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데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었다. 여기서 햇볕정책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의 약 10년간의 인지적 균형상태의 변동을 승인해 주는 ‘자기-준거(self-reference)’적 성격을 보여준다[김상일, 『퍼지 논리와 통일철학』(서울: 솔, 1995)]. 다시 말해, 변동의 동력은 민중의 민주화운동이었고, 그 외중에 반미주의와 자주적 성향은 현현(顯現)했으며, 김대중 정부의 집권은 결국 10년간의 운동에 공식적 승인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행이 완성된 것이다.

서 독재정권과 민주, 즉 o와 p가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구조적인 대립 관계를 해결했던 것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즉, 그 적대적 균형 관계가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파기되었고, 동시에 북한의 이미지도 ‘주적’에서 ‘한민족’과 ‘동반자’로 다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남한과 북한의 구조적 대립을 협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반미주의의 토대가 분단체제이고, 그 분단체제는 통일에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³¹⁾ 따라서 반미주의의 극복과 통일은 경향적 상관성을 가진다. <표 6>은 북한의 이미지와 정치적 선택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인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북한의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함의가 일치함을 보여준다.

인지적 균형이론은 동북아 6개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그림 4>는 인지적 균형 이론을 복합모델로 발전시켜 다자간 균형의 예측모델로 구현한 것이다. 이 그림은 좌상향으로 가는 시간의 방향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형에서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접합과 그 안에서의 인지적 균형의 발생과 변동을 표현하고 있다.³²⁾ 이념적 갈등의 종식과 국가간 신질서의 재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미국을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하며, 소련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회유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협조를 통한 동북아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각각의 국면을 해석하는 데 이러한 균형모델은 활용될 수 있다.

31)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남북 간 대립사회체제의 동요와 새로운 갈등구조의 이해,” 『경제와 사회』(2001년 봄호 특별부록: 제3회 비관사회학대회 논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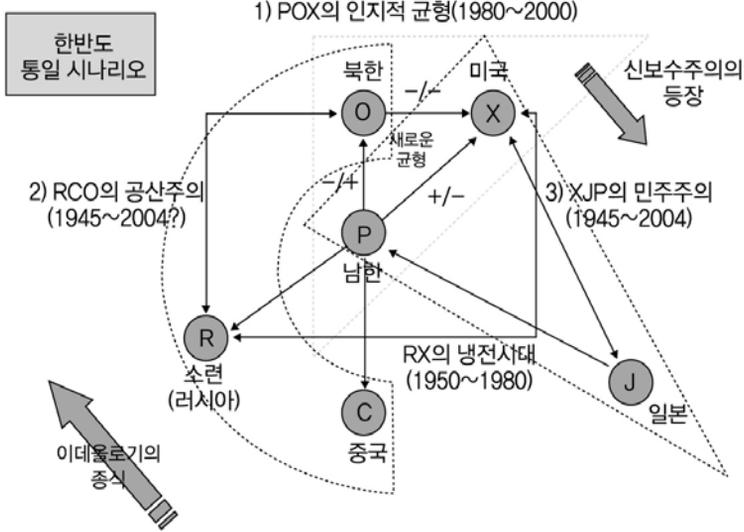
32)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지형적 접합은 실제로는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적 접합에 토대한다. Bowles, Samuel and Herbert Gintis,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Capitalism,” *Politics and Society*, vol. 11, no. 1(1982), p. 44 참조.

<표 6> North Korea Images and Policy Choices†

이 미 지	국 면 상 태	인 지 상 태	정 서 적 기 초	정 서 적 경 향	사건들		체 도 적 틀	결 과	해 결 책
					Up	Down			
첫 번째 이미지	중 오 주 적	반 공 주 의 미 움 불 안	적 대 (-)	냉 전	- Korean War	- 1953 Cease-Fire	- US-ROK	전 쟁 / 평 화 정 착	전 쟁 억 제
					- Assassination Attempt-1st Lady Killed	- 1974 July 4th Joint Communique	- Security Alliance		
					- Assassination Attempt-Rangoon Bombing	- 1991 Basic Agreement	- Four-Party Talks		
					- Submarine Incursions	- 1993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Six-Party Talks		
					- Missile Test	- 1994 Agreed Framework	- OK-Japan Security		
					- Kumchang-ri Nuclear Construction	- 1994 Agreed Framework	- Understanding ROK-PRC Security		
					- 1954 Geneva Agreement	- 1970 Presidential Peace Offer	- Cooperation ROK-Russia Security		
					- 1972 Red Cross Meetings	-	-		
					- 1994 Agreed Framework	-	- Cooperation		
					두 번째 이미지	동 조 한 민 족	민 족 적 연 민 민 족		
세 번째 이미지	연 합	공 공 복 리	우 호 (+)	-	-	-	-	번 영 / 평 화 통 일	협 조 지 원

† Yang, Sung Chul, "Kim, Dae-joong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Policy Directions,"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9), pp. 26~27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그림 4> 동북아 6개국의 정세와 복합 인지균형 모델†



† 이것은 남북미의 균형이론인 pox의 관계를 동북아 6개국으로 확장한 모형으로 이념적 좌표에 따라 RCO의 공산주의 진영과 XJP의 민주주의·자본주의 진영으로 구분했다. 각각의 집합적 인지에 따라 6개 국가와 3개의 그룹이 자기 그들의 균형관계를 취하는 복합 모델을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4. 고찰

본 연구의 목표는 반미주의를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미주의의 성격이 역사적·구조적 틀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동성은 1950~80년대, 1980~90년대 그리고 1990년 이후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반미주의의 시기 구별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80년대 이전이 전반적으로 친미감정라면, 80년대 이후에는 반미주의,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념적 혼재가 특징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각각의 개념이 ‘반미감정 → 반미운동 → 반미주

의'로 상승하는 하나의 위계성이 나타났다. 즉, 반미감정이 개인의 내면적 태도라면, 반미운동은 그런 태도가 집합적이고 가시적인 차원에서 표현되는 것이고, 반미주의는 그런 표현이 사회적인 동의 속에서 비교적 뚜렷한 운동의 주체와 슬로건,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80~90년대에 마련된 반미주의의 초기 조건은 그 이후에 이 현상을 재현하는 토대가 되었는데, 오늘날의 반미감정은 이런 구조적 여건과 그것을 거쳤던 역사적 기억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쉽게 촉발될 수 있었다. 광주항쟁의 기억이 두드러졌던 80년대의 태도가 2000년도에 오노 사건, 효순이·미선이 사건, 촛불시위, 그리고 FTA에 이르기까지 쉽게 촉발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일회적 현상이 아닌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효과의 숨은 형태로 작동된 것이다. 결국 반미주의를 규명하는 작업은 바로 80년대의 반미주의와 오늘날의 반미감정의 변이과정을 분단체제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한미관계와 분단의 문제가 교착된 것인 동시에, 반미주의가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작업이다.³³⁾

본 연구에는 여러 복합한적 쟁점들이 개입되어 있다. 첫째는 분단체제의 기원으로 북한의 체제구축 시점이다. 보통 주체사상 관련 연구들은 그 전형성과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1930년대 형성론(김일성 항일유격투쟁에 방점)과 1950년대 형성론(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진화에 방점)의 논의가 여전하다.³⁴⁾ 그리고 주체사상은 수령론, 강성대국론, 선

33) 장달중, “반미운동과 한국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미국』 (1988);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남북한 갈등구조 해소방안에 대한 모색,” 통일연구원 심포지엄(연세대학교 알렌관, 2001).

34) 정성장, “주체사상 연구의 쟁점,” 현대북한연구회 편,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1』(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및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47~62쪽 참조. 이미 주체

군주의에 의해 대체되었는가 아니면 지속하는가의 논쟁도 과제로 남겨 두고 있다.³⁵⁾ 여기에서는 1950년도 이후의 사회주의체제의 성립을 분단체제론의 시작 시점으로 잡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는 관계성에 기반한 연구가설에 의할 때 불가피하다. 둘째는 북한의 대미인식 문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대미인식이 거의 변화 없이 적대적이라고 본다.³⁶⁾ 다만,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는 북미 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보인 것은 1970년 이후에 카터(J. Carter) 정부라고 지적한다.³⁷⁾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1980~90년으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남한의 대내적 인지관계만이 고려되고 대외적 인지관계가 배제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집합적 인지의 주체가 남한의 대중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회피 가능하다. 셋째로 역사적 기술의 문제이다. 미국의 패권과 한반도의 민족주의를 주로 기술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이것은 기존 연구를 따른 것으로,³⁸⁾ 당시 다수의 역사관이 따르는 기술방식을 취한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남한의 집합적 인지를 남한에 고유한 것으로 보았으나 남북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북한과의 길항관계에서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즉, 일부 소수집단에서는 북의 주

사상의 확립은 유물사관의 창조적 적용을 강조하는 1950년대에 있었다. 김일성, 『김일성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재판).

- 35) 서재진,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북한체제의 현주소』, 학술회의 총서 02-02(통일연구원, 2002), 15쪽.
- 36) 이항동, “로동신문 사설분석에 의한 북한정책의 변화: 1987~1996,”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4호(1997).
- 37)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 “대일 대미관계,” 김준엽·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서울: 법문사, 1985), 341~346쪽.
- 38) 이해정, “패권의 굴레: 북미 갈등과 한반도의 평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연구의 성찰』(서울: 한올아카데미, 2005), 345~3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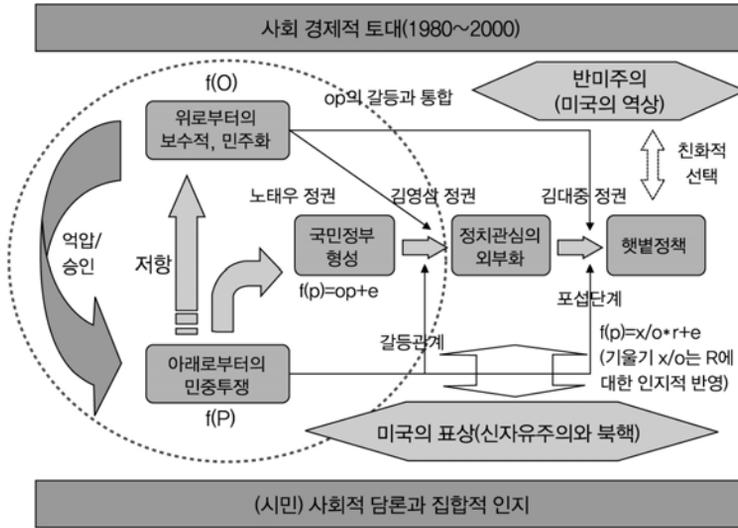
체사상에 따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상에 의한 사회주의 모델을 주체화하는 방식³⁹⁾은 형식적 예측모델 내부의 담론적인 파열 관계를 봉인(封人)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닐 수 있다.⁴⁰⁾ 결국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유물사관이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1955년 이후 향후 10년 동안 사관의 체제 적용이 진행된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⁴¹⁾ 이러한 거친 예측모델의 토대를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반미주의는 분단체제에 의해 1980년 이후 지속·재생산되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한미관계에서 형성한 물질적 토대가 경제적, 정치적, 군사안보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영역으로 범주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구조적 요인이 80년대부터 하나의 독자적이고 발현적인 차원에서 반미주의를 야기했다. 물론 전반적인 대중의 인지적 태도를 개개인으로 환원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반미주의를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반미주의적 태도를 상당히 취하고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지 않는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결론이 아니며 이 글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함의를 역사사회학적으로 일반화하면 <그림 5>와 같다.

-
- 39) 주력군으로서 군대와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의 2대 역량으로 제시하면서 인민대중을 구분하는 범주를 사회계급적 토대가 아니라 사상에 근거시키고 있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473쪽.
 - 40) 북한의 역사인식에 대한 주체화된 태도는 이러한 담론의 침예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한다. 정상돈, “역사인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 41)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주체사상 총서 2(서울: 백산서당, 1989).

<그림 5> pox의 함수관계로 본 인지적 균형과 역사적 변동



이것은 $f(p)=x/o \cdot R + e$ 라는 함수를 통해서 80년대 이후의 인지적 균형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초기에는 정부와 시민이 각기 $f(o)$ 와 $f(p)$ 라는 개별적 함수를 통해서 갈등했으며, 결국 시민의 저항에 의한 정부의 보수적 민주화로 그들의 정당성이 승인되었다. 그에 따라, 군부정권은 $f(p)=op+e$ 라는 함수로 표현된다. 이것은 봉합된 대내적 갈등을 나타내는데, 남한의 상황이 op 의 접합과 그들의 오차항[갈등의 여파와 마찰]으로 정의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통합된 상황은 (시민)사회의 담론을 대외적인 부분으로 이끌었고, 여기서 사회적 담론은 $f(x)$, 즉 미국의 표상을 새롭게 포착한다. 물론 이런 포착은 80~90년대의 민주화 투쟁 속에 녹아 있던 자유의식과 통일운동에 대한 체험이 관성(inertia)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결국, 2000년대는 미국의 표상과 그에 대한 역상으로서의 반미주의가 우리나라 대중의 집합적 인지 속에 자리 잡

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f(p)=x/o*R+e$ 라는 함수가 생성된다. 즉, 시민사회(p)는 통일(R: unification)으로 접근하지만 그 과정에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지적 균형관계로서 x/o가 곱하여지고, 또한 pox의 삼자관계의 갈등[오차항]이 더해지는 형태인 것이다.

5. 결론

1980년대 이후 국가의 이념적 대립은 미국을 축으로 하여 확산되는 일종의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념적 갈등인 친미/반미의 성향을 거시적 국가 관계의 변동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속적인 갈등의 숨은 구조에는 분단체제론의 경로의존 효과가 내재하고 있으며, 이를 인지적 균형 이론으로 모델링할 때 장기적인 관계 변화의 예측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지적 균형 이론의 검증을 위하여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단면모델을 구축하고 여기에 거시역사사회학적 이론을 통해 거시-변동 모델을 정립했다. 서베이 자료는 2003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한국인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N=1,200명;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3.0\%$ 포인트)를 이용했으며, 북한과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집합적 인지의 관계성을 다중회귀분석, 다차원척도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했다. 특히, 연령에 따른 세대간 정교화 분석을 통하여 미시적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 거시적이고 집합적인 국가 간 인지관계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를 역사사회학적 이론 틀로 모델링하여 하이드의 균형 이론의 적합성을 검증했다.

회귀분석 결과 미국과 북한의 집합적 인지에 대한 부(-)적 관계 모

델은 매우 유의했다($p < 0.00$, $R^2 = 0.148$). 연령별로 정교화한 모델 역시 매우 유의했다($p < 0.001$, $R^2 = 0.250$). 다차원척도분석 결과에서는 두 개의 요인에 의해 구성된 2차원 공간에 6개의 변수들이 위치했는데, 크게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가장 상이했으며 일본은 이와 다른 차원의 대립구조를 보였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인지적 대립은 없었다. 계량분석을 바탕으로 하이드의 인지적 균형 모델을 구성하여 현대사에 적용한 결과 80년대 이전에는 P[남한], O[북한], X[미국]의 관계가 $p \rightarrow o = (-)$, $o \rightarrow x = (-)$, $p \rightarrow x = (+)$ 의 미국 중심 균형모델이었으나, 80년대로 진입하면서 $p \rightarrow o = (-)$, $o \rightarrow x = (-)$, $p \rightarrow x = (-)$ 의 불안정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군부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런 구조적 불안정은 내부적으로 봉인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p \rightarrow o = (+)$, $o \rightarrow x = (-)$, $p \rightarrow x = (-)$ 가 되면서 균형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햇볕정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국내의 인지적 관계는 국가와 시민이 각기 $f(o)$ 와 $f(p)$ 라는 개별적 함수를 통해서 같등했으며, 결국 시민의 저항에 의한 군부의 보수적 민주화로 그들의 정당성이 승인되었다. 이것을 $f(p) = op + e$ 라는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국내 같등이 종식되고 국가 간 집합적 인지가 부각된 상황을 남한의 대내적 불균형인 p_o 의 집합과 그들의 오차항으로 상정한 것이다. 90년대 이후 이러한 통합 국면은 대외적 인지로 나갔는데 여기서 사회적 담론은 $f(x)$, 즉 미국의 표상을 새롭게 포착했다. 물론 이런 포착은 80~90년대의 민주화 투쟁 속에 녹아 있던 자주의식과 통일운동에 대한 체험이 관성으로 지속된 것이기도 하다. 결국, 2000년대는 미국의 표상과 그에 대한 반대 표상으로서의 반미주의가 우리나라 대중의 집합적 인지 속에 자리 잡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f(p) = x/o * R + e$ 라는 이론함수가 생성된다. 즉, 우

리 시민사회(p)는 통일로 접근하지만 그 과정에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지적 균형관계로서 기울기인 x/o 가 곱해지고, 또한 pox 의 삼자 관계의 갈등이 오차항으로 더해지는 형태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 접수: 2월 22일 / ■ 채택: 3월 26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일성, 『김일성선집』, 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주체사상총서 2(서울: 백산서당, 198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구갑우,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김상일, 『퍼지 논리와 통일철학』(서울: 솔, 1995).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서울: 사회비평사, 1996).

김진웅, 『한국인의 반미감정』(서울: 일조각, 1992).

서재진,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북한체제의 현주소』, 학술회의 총서 02-02(통일연구원, 2002).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 “대일 대미관계,” 김준엽·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서울: 법문사, 1985).

아태평화재단 편,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서울: 한울, 2000).

유영익, 『한국인의 대미인식』(서울: 민음사, 1994).

이영선 편, 『통일준비』(서울: 오름, 1997).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서울: 필맥, 2003).

이혜정, “패권의 굴레: 북미 갈등과 한반도의 평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연구의 성찰』(서울: 한올아카데미, 2005).

장달중, “반미운동과 한국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미국』(1988).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서울: 나남출판, 2004).

정봉화, 『대결에서 공존으로』(서울: 한올아카데미, 2000).

정상돈, “역사인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정성기, 『탈분단의 정치경제학과 사회구성』(서울: 한올아카데미, 2002).

정성장, “주체사상 연구의 쟁점,” 현대북한연구회 편,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1』(서울: 한올아카데미, 2005).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서울: 함께읽는책, 2002).

조희연,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서울: 함께읽는책, 2003).

최원규 편,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올아카데미, 2001).

홍성태, 『반미가 왜 문제인가?』(서울: 당대, 2003).

홍순호 외, 『북한인식과 한반도』(서울: 살림, 1999).

2) 논문

김진웅, “반미주의의 성격과 기원,” 한국미국사학회 편, 『미국사 연구』, 제2권(1994).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남북한 갈등구조 해소방안에 대한 모색,” 통일연구원 심포지엄(연세대학교 알렌관, 2001).

이항동, “로동신문 사설분석에 의한 북한정책의 변화: 1987~1996,”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4호(1997).

정지원·차재호, “연계수정으로 본 Heider 삼원구조내의 태도 연계와 신념연계의 질적 차이,”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연차학술발표대회(1998).

차재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한국심리학회 학술심포지엄, 통일과 심리적 화합(1993).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남북 간 대립사회체제의 동요와 새로운 갈등구조의 이해,” 『경제와 사회』(2001년 봄호 특별부록: 제3회 비판사회학대회 논문집).

3) 방송 및 신문

『경향신문』, “극단적 반미주의를 경계한다” 2002년 2월 20일.

『동아일보』, “감상적 반미주의” 2002년 3월 26일.

_____, “위험한 반미” 2002년 3월 9일.

_____, 1987년 4월 1일 관련기사 통계자료.

문화방송, “한국, 한국인 광복 45주년 국민의식 조사” 1990년 8월 10일.

『문화일보』, “한국 반미주의의 교훈” 2002년 1월 21일.

_____, 2000년 12월 21일 1면 기사.

『조선일보』, 1985년 3월 15일 및 1990년 9월 17일 관련기사 통계자료.

『중앙일보』, “반미주의 왜 문제인가” 2002년 1월 21일.

_____, “知美 用美 전략을” 2000년 4월 13일.

_____, 1988년 6월 6일 및 1989년 9월 22일 관련기사 통계자료.

『한국일보』, “주목되는 반미감정의 즐기와 앞” 2002년 2월 7일.

3. 국외 자료

1) 단행본

Poulanzas, Nicho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London: Verso, 1978).

2) 논문

Bowles, Samuel and Herbert Gintis,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Capitalism,” *Politics and Society*, vol. 11, no. 1(1982).

Burawoy, Michael, “Two Methods in search of science: Skocpol and Trotsky,” *Theory and Society*, vol. 18(1989).

Goldstone, Jack A., “Initial Conditions, General Laws, Path Dependence, and Explanations in Historic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4, no. 4(1998).

Mahoney, James,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Social Theory*, vol. 29, no. 1(2000).

Pierson, Paul,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2000).

Yang, Sung Chul, "Kim, Dae-joong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Policy Directions,"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9).

An Approach to Macro-Mechanism of Division System Using Cognitive Balance Theory

Focusing on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America, 1980-2000

Jung, Min-so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become a kind of social pathological phenomenon that some national ideological confrontations after 1980 have been diffused by the center of the American position. This paper analyzes a tendency toward (anti) Americanism as a basis for those ideological conflicts using the logic of cognitive balance. Specifically, it shows that a hidden structure of sustainable conflict was immanent in the effect of path-dependency. By formulating this into a theory, we can propose an estimation model for unification.

This research verified the collective South Korean cognition of the citizens of America and North Korea. Research data is from “A Study of Korean Values and Attitudes in 2003” (N=1,200; sampling error in 95% CI=±3.0%), conducted by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used were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how cognitive balance theory is constituted using elaborative analysis by age.

According to the regression, the reverse model of collective cognition of America and North Korea ($p < 0.001$, $R^2 = 0.148$)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lso, a model by age ($p < 0.001$, $R^2 = 0.250$) was analyzed. In the MDS results, it was largely shown that the opposition of America and North Korea was extreme while Japan was in the other dimension, located by using six variables made up of two factors. China and Russia were not found to be in a cognitive conflict. In applying the CBT model, the relation of P(South Korea), O(North Korea), and X(America) varied by period. In the first stage (before 1980), the model was balanced by North Korea: $p \rightarrow o = (-)$, $o \rightarrow x = (-)$, $p \rightarrow x = (+)$. But during the second stage(1980-1990), the model was unbalanced by an internal conflict within South Korea: $p \rightarrow o = (-)$, $o \rightarrow x = (-)$, $p \rightarrow x = (-)$. Nevertheles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military-led government, structural instability was steadily overcome. Therefore, a new balance was formed after 1990: $p \rightarrow o = (+)$, $o \rightarrow x = (-)$, $p \rightarrow x = (-)$. This has been attributed to the Sunshine Policy.

In the 1980s South Korea's cognitive relations were in a complicated situation caused by both the authorities and citizens. Consequently, their justification was approved by a conservative democracy by virtue of the people's resistance. This can be expressed by the function "f(P)=op+e". Under the circumstance of change from internal to external cognition, "po" is a conjunction of imbalance reflected by P

(South Korea). Then the unified phase seized upon the symbol of America, represented by social discourse “f(x)”, which drew the next phase into external cognition. The effects of inertia, also called path-dependency, have been represented by (anti) Americanism. This is expressed by the function “f(p)=x/o*R+e”. Namely, the Korean Peninsula (p) is approaching unification (R); in that process, however, the multi-relational cognition intervention is in the shape of the slope “x/o”.

Keywords: Cognitive Balance Theory, Division System Theory, Multi-Dimensional Scaling, Path-Dependency